

계약금액의 2~3배까지 폭증 끝없이 불어나는 공사비에 플랜트건설 현장은 ‘벼랑끝’

국내 발전플랜트 공사현장이 살인적인 공사비 폭증으로 인해 적자 예상폭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일러·기계 등을 설치하는 기전공사의 경우 실행률은 100%가 넘는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200~300%에 이르는 곳도 있다. 이러한 적자 시공은 결국 품질저하 및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플랜트가 대부분인 해외건설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7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 1·2호기에서 주기기 설치 협력업체로 시공참여 중인 G사와 J사의 경우 준공금액은 나란히 1,0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초 계약금액이 각각 489억원, 493억원이었으니 실행률은 217%·215%에 이른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동서발전의 당진 9·10호기 기전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S사의 준공 추정금액은 1,100억원. 당초 계약금액(544억원) 대비 실행률은 202%에 육박한다.

서부발전의 태안 9·10호기 기전공사에 협력 시공 중인 또 다른 S사의 실행률은 207%. 당초 560억원에 계약했으나, 준공 시 총 1,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준공된 남동발전의 영흥 5·6호기에 참여했는데, 이 역시 실행률은 무려 30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0억원에 공사 계약을 했지만 실제 실행 금액은 3배가 넘는 920억원이 유력하다.

남동발전의 여수화력 1호기, 한국중부발전의 신보령 1·2호기에 참여 중인 G사 및 또 다른 J사의 실행률은 2배까지는 아니지만 150%를 훌쩍 넘고 있다.

대부분 기전공사와 연관된 하도급 설비업체들이지만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건설사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척그린파워 주기기 설치를 맡고 있는 종합건설사 H사 관계자는 “처음엔 목표 실행을 90%대 후반으로 잡았다. 그러나 준공을 1년 정도 앞둔 지금 이미

100%를 넘어섰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공사비 폭증이 자칫 효율저하나 시설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는 “플랜트 공사는 설계대로 효율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공사비 폭증으로는 공기 준수는 물론 정상적인 효율을 담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해외건설 수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업계 다른 전문가는 “해외건설 수출 중 플랜트의 비중은 80%에 달한다. 그런데 준공시점이 늦춰지거나 효율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무한경쟁하는 해외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발전플랜트의 적자 시공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향후 국가적인 손실까지 고려해 풀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 책정 실패 - ‘대형 석탄화력’ 시행착오 따른 비용 전가

플랜트 공사, 그 중에서도 발전플랜트 공사는 그동안 건설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였다. 토목·건축에 비해 실적사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다. 최저가 낙찰률도 원전을 제외하면 80%대 중후반으로 75% 수준인 토목·건축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예산책정의 미흡이다. 공사비 폭증이 두드러진 삼척그린파워 1·2호기(남부발전), 태안 9·10호기(서부발전), 당진 9·10호기(동서발전), 신보령 1·2호기(중부발전) 등은 MB정권 시절인 2012년부터 발주가 이뤄졌다. 예산절감을 주장하는 정권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설계기준 예산액 대비 10~20%를 감액해 발주한 것이다.

여기에 이들 발전소 모두 대부분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라는 점이다. 500MW 표준화력의 경우 설계·시공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공사비 책정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1,000MW급은 과거 준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설계·시공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사실상 상세설계 내역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500MW를 기준으로 2배로 계산해 공사비를 산정해 발주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은 크게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000MW라고 해서 단순히 500MW에 곱하기 2가 아니다. 500MW와 1,000MW는 시설물과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단위나 중량이 다르다. 설계내역서가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발주처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약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부담이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다.

상세설계 내역서가 없다는 부분은 공종단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삼척그린파워 1·2호기의 경우 서해안 쪽의 화력발전소를 기본으로 해 설계단가를 뽑았다. 그러나 동해안에 위치한 삼척그린파워 부지는 서해안과 달리 암반이 많아 굴착이 어려운데다, 바닷가치고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굴착비용도 다르고 기기·기계 운반비용도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플랜트 공사의 일반적인 물량 공급이 단가가 아닌, 공종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급자재 조달도 공사비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발주기관들은 중소기업 우대정책으로 상당 부분의 기자재들을 물품으로 발주해 현장에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자재를 조달받아 막상 공사를 하려면 2~3개 부품이 빠져 있는 게 다반사이다. 이럴 경우 빠진 부품이 올 때까지 해당 공사는 중지가 되는데, 이에 따른 협력업체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사를 위해 장비 및 인력의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 계산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외적으로 플랜트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플랜트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인 만큼 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플랜트 근로자의 노무비가 2~3년 사이에 20% 이상 상승했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을 전후로 전력예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자 전력부족 사태를 우려한 전력당국이 발전소 건설사업을 줄줄이 인가한 게 노무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원전 3곳, 석탄화력 6곳, 복합화력 7곳 등 무려 16곳의 발전소 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더욱이 플랜트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령화되어 노무비 상승에 비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강성인 플랜트 건설노조의 노사분규로 생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견디다 못한 몇몇 협력업체들은 직장패쇄로 맞서기도 했다. 건설사나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노동의 탄력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토목·건축 등 다른 건설공사와 달리 플랜트 공사는 2008년 노사정 합의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2008년 노사정 합의 당시에는 플랜트가 국가 보안시설로 기술유출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불허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도 대부분의 인력들은 제3국에서 충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한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발주기관 및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읍소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한전 발전자회사 건설담당 팀장 및 산업부 사무관과 적정공사비와 관련한 회의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발전플랜트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는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해외건설 수출의 침병 노릇을 하고 있는 국내 플랜트 산업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뜻”이라며, “현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동반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현장 여건에 따라 과투입된 공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형평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플랜트 현장의 인력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